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주장 장수 동화댐 주민피해 줄이기 위한 댐 건설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

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열린 제241차 월례회의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제



24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는 장수군의회에서 제241차 월례회의를 갖고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택하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 받고 차별당해 온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할 경우 인구가 100만에 못미치는 전주시는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최근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시 연담화 현상으로 경상권과 충청권의 규모화가 가속되면서 광역시 없는 전북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고립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관심과 푸대접 속에 지역 소멸위기에 다다른 전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회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함께 뛰자”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수군 범야권 동화댐 인근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 받고 있으나 「담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불이익이 크며 동화댐도 이 법률을 적용 받아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달라는 댐 건설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문 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언급 靑 “민주 절차 따른 행사 천명”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할 사항”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를 통한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 입장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말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행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

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로 대기업 경영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병준, 한국당 당대표 불출마 황교안·오세훈 출마 ‘부정적’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대표 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기정사실화 된 전대 출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황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 “이 분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며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 거가 낮은 점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당 대표로 출마를 고심하던 김 위원장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당대회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등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문 대통령 67번째 생일... 정치권·지지자 축하 ‘눈길’

여야 지도부, 홍삼·난 등 선물 지지자들, 서울역 외부 전광판 ‘생일 축하합니다’ 광고 띄워

24일 취임 후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권과 지지자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축하 게시글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24일 생으로 이번이 67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한 이벤트 없이 가족과 생일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축하 난’, ‘홍삼 세트’, ‘꽃’ 등을 선물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홍삼을 선물했다. 이 대표 측은 “건강을 챙기면서 국정 운영을 하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난을 선물했다. 다만, 따로 메시지를 담은 카드는 안 넣었다고 한국당 측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축하 난을 보낸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난을 보냈다. 문구로는 ‘축생신’을 적었다고 바른미래당 측 관계자는 전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문구가 새겨진 난을 보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 꽃이 담긴 꽃바구니를 보냈다. 정의당 측 관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에 새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란 꽃바구니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23일 서울역 외부 전광판에서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실으며 이벤트를 선보였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목으로 청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이따리 야당 보수단체 보수언론들이 공격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나랏일에만 집중해달라”며 “끝까지 위에서 지지하고 지켜드리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꼭 부탁드릴 게 있다”며 건강을 챙겨달라고 했다. /뉴시스

“체육계 성폭력 방지 법안 2월 국회서 처리”

당정, “선수에 상해 입힌 지도자, 자격 정지·영구 제명”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를 둘러싼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대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을 인식을 같이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 및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관할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스포츠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선수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소멸시효를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단체 자체 규정을 개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인권 교육과정

을 개편한다.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청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일부 중목 등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적주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 개선에 공감대를 이룬 당정은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조 의장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소년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학교 체육합숙시설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에 대한 검토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제5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책만기업을 위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에도 자원재사용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배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경 소나무 43,000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종이 수확에 따른 외화비용을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 받은 친환경용지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두 배 이상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책만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6rg 한국지질환경학회
Korea Recycling Corporate Coalition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